

안보통일센터

UN안보리 『대북제재결의 2371호』
채택 관련 동향 및 시사점

2017. 8. 9



SECURITY
FOCUS

안보포커스



재단법인
여의도연구원
THE YEUIDO INSTITUTE

1. 개 요

○ UN안보리 《대북제재 결의 2371호》 채택(8.5)

- 안보리, 북한의 7·4 및 7·28 두차례 ICBM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·강화한 《결의 2371호》를 만장일치로 채택
- 이번 결의는 전문 10개항, 본문 30개항, 2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,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(2006년) 이후 8번째

○ 주요 내용

외화수입 차단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산 석탄·철·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(기존 제재 확대·강화) • 북한산 납·납광석·해산물 수출금지 (신규 제재) •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(신규 제재) •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채용 금지 (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)
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二重용도 통제품목 추가 (기존 제재 확대·강화) • 인터폴에 제재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(신규 제재)
해상봉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북제재위원회(1718위원회)에게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권한을 부여, 지정된 선박의 유엔 회원국 입항 불허 (항공봉쇄는 未포함)
제재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 핵·미사일 개발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곳 추가 (신규 제재대상 지정)
인 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깊은 우려 표명

2. 평가 및 對북한 효과

○ 평 가

-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△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·강화하고, △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추가하며, △제재 대상 개인·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 포함
- 이는 2016년의 2270호와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, 북한 핵·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,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 불용 메시지가 북한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 기대
- ‘美 외교의 승리 vs. 中 외교의 승리’로 엇갈린 평가
 - (뉴욕타임스)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외교적인 승리
 - : 북한 원유공급 중단이 제재에서 빠졌지만 중·러가 제재에 합의한 것이 훨씬 중요
 - (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) 北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 제재를 연기하고 있어 중국외교의 승리
 - 이처럼 이번 2371호는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며, 향후 또 다른 제재안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겼음

○ 對북한 효과

<p>외화수입 차단조치</p>	<p>■ 총 4개의 수출분야 명시 : 석탄 4억불, 철.철광석 2.5억불, 납.납광석 1억불, 해산물 3억불 등 약 10.5억불(약 1조 1,800억원) 상당의 북한 외화수입 차단 효과 예상 ☞ 이는 북한 연간 대외수출액 30억불의 1/3 수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산 석탄·철·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☞ 제한적 수출 허용 전면 금지, 사실상 中 겨냥한 조항 ※ 러시아의 나진항 활용 석탄 수출 제재 적용 제외 • 북한산 납·납광석·해산물 수출금지 ☞ 수출 금지 광물 총 10종류 증가, 北 수출액 7% 차지 수산물 수출 금지 •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☞ 北 광물·수산물 겨냥한 中 기업의 對北 투자 불가능 •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채용 금지 ☞ 해외노동자 동결(※현재 40여개국 5만명 이상 파견 중)
<p>WMD 및 재래식 무기 禁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二重용도 통제품목 추가 및 인터폴에 제재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☞ 北의 모든 연결고리를 ‘핀셋’으로 집어내 제재를 가하고, 무기개발을 할 수 있는 부품 조달 네트워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실효적 조치 도입
<p>해상봉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선박의 유엔회원국 항구 입항 금지 ☞ 北 해상교역 봉쇄를 통해 돈의 흐름 완벽 차단
<p>제재대상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 핵·미사일 개발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곳 추가 ☞ 北 외화벌이 기관 ‘39호실’ 연계 단체·해외업무 총괄 개인 등 ‘정밀타격’
<p>인 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깊은 우려 표명 ☞ 北 핵·미사일 개발이 北주민에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주목

3. 북한 및 주변 4국 반응

○ 北, '정부성명' 발표(8.7)

- “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”
- “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”
- “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”
- “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노선을 더 높이 추켜 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”

※ 병진노선은 ‘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’을 병행 추진

○ 미 국

- (트럼프대통령 트위터) “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 있을 것”
- (헤일리 유엔주재 美대사) “이번 세대(a generation)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,” “북한정권에 대한 단일제재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,” “이번 제재로 수출액의 1/3과 경화(hard currency) 수입에서 타격을 입을 것”
- (워싱턴포스트) “유엔안보리 제재에도 예외조항을 이용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개발을 했다,” “이번 유엔결의안을 통해 그동안 제재의 ‘구멍’을 메울 수 있을 것”
- (월스트리트저널) “이번 대북제재안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필요, 그 전에 북한이 대기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수 있어 유엔 대북제재안 너무 늦었다,” “중국이 제재안을 완벽히 실행할지 의문”

○ 일 본

- (아베총리) “북한에 대한 압력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”
- (니혼게이자이신문) “제재의 허점을 막고 실효성을 끌어올리려면 안보리 회원국이 결의안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·감독하는 것이 필요”

○ 중 국

- (왕이 외교부장) “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.” “제재가 최종목적이 아니며, 목표는 한반도 핵문제를 다시 협상테이블로 가져오는 것”
- (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) “이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큰 의미,” “한반도의 비핵화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, 대화나 6자회담 등을 통해 이뤄져야,” “북한은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해야.” “미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중단해야”
- (신화통신) “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핵·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”

○ 러시아

- (네벤샤 유엔주재 러시아대사) “사드배치가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우는 요인”

4.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

【시사점】

- 미·중·러 대북제재 빅딜을 통한 攻守의 성공으로 한반도에서 치열한 ‘수 싸움’의 서막
 - 중국 입장을 배려, 對北 원유공급 중단과 제재대상에 김정은을 배제한 대신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금지는 수용
 - 김정은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방점, 北 수출 차단으로 핵·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과 북한경제 타격 의도
 - 대북제재 회의론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 의문에 대한 공방 가열 양상
- 北·美 ‘強對強’ 한반도 군사적 긴장 연속 및 美·中 新동북아 헤게모니 쟁탈
 - 北·美 ‘강對강’ 대치국면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
 - (8.5,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)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위해 ‘예방전쟁 (preventive war)’을 군사옵션에 포함
 - (8.9, 北전략군 대변인성명) 화성-12형으로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 (Guam) 포위사격 단행을 위한 작전방안 검토 위협
 - 또한,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時 즉시 서울을 포함한 1,3 야전군 지역을 불 바다로 만들고 한국 숲 중심에 대한 동시 타격을 위협
 - (중국) 사드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‘변화’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韓·美 압박
 - ※ (왕이 中외교부장) “한반도 사드배치가 북핵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못한다,” “사드는 한국의 정당한 방위 요구를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” 등

- (中·러 외교장관) 北이 요구하는 ‘쌍중단(雙中斷: 북한 핵·미사일 도발 중단과 韓·美 연합군사훈련 중단)’을 통한 6자회담 재개 추진 합의
 - (북한) 외교채널과 ‘당對당’ 채널을 통해 중국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, 북한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명분삼아 對中 압박 예상
- 미국의 ‘북한·이란·러시아 제재법안’과 UN안보리 《결의 2371호》가 짝을 이루어 對北·對中 압박 심화 전망

§ 트럼프대통령, ‘북한·이란·러시아 제재법안’ 서명(8.2)

【주요 내용】

- 원유석유제품 北 유입 봉쇄
- 北 노동자 해외 고용 금지
- 북한과 상품거래(온·오프라인) 금지
- 北 도박사이트 차단
- 北선박과 유엔의 對北제재 거부한 국가들의 선박 美 영해 운항 금지

○ 미국의 북한 공격을 위한 대내외적 명분 축적 우려

- 북한의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(개발완료 임박), 북한의 연이은 對美 핵·미사일 공격 가능 천명 및 미국 조롱 등

※ 지금처럼 미국에 대해 핵·미사일 공격을 공개 천명한 국가는 舊소련과 북한 2개국뿐

- 오래된 평화국면(long peace)의 지속으로 미국사회內 反戰여론 및 전쟁 공포심리 약화

※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, “미국민 대상 대북인식 여론조사의 시사점,” 『안보포커스』 2017-05(7.17) 참조

【정책적 제언】

○ 국회內 ‘대북제재 검증 특별위원회’ 설치 제안

- 혼란한 국정상황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와 대응이 긴요하므로 국회차원의 ‘대북제재 검증 특별위원회’ 설치
- 특위 구성은 외교부, 통일부, 국방부, 국정원 및 해당 경제부처의 참여 아래, 효과와 미흡한 부분을 지속 보완토록 함
- 同 특위 구성을 통해 대북제재 측정 지표 개발, 북한 내부의 제재 영향 파악 및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

○ 대북제재국면의 지속을 ‘常數’로 간주한 黨의 대북·통일 정책방향 정리

- 만약 극적으로 북핵·미사일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, 이를 감안한 대북·통일정책의 구상이 필요함
 - ※ 文정부의 ‘한반도 신경제지도’와 ‘평화체제 전환’ 등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실천의 탄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특히, 黨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에 입각한 대북·안보·통일 관련 기조 및 정책방향의 정리가 시급

○ 아울러, ‘8월 위기설’ 및 위기 뒤 ‘전격적인’ 유화국면에 대비한 黨 차원의 TF 가동 필요